

Online Media and Crisis of Ideological Conflict

Woo Young Cha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ro 13-13, Hayang-eup, Gyeongsan, Korea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deological conflicts on the online space in Korea and discusses its findings. Specifically, it explores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 and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Examples of analysis include critical agenda such as candlelight demonstrations for anti-US beef imports, online community titled "Ilbe"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se issues were actively discussed around the online space, which reflect and reveal ideological conflicts prevalent throughout the online society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for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philosophy of online media regulation.

Key words: crisis, ideological conflict, online media, regulation policy

1. 들어가며

정보통신혁명으로부터 출원하는 변화와 전망을 둘러싼 정보사회 담론은 각축적이다. 흔한 분류법으로 정보사회의 귀착지가 유토피아(낙관론)일지 디스토피아(비관론)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에서 유의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 정보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며 하루가 멀게 다양한 사회의제를 파생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동인으로 기술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정보사회는 전 단계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 뚜렷하게 대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사회양식(social mode)으로 이해된다(Webster, 1997).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은 개인행동을 정의하는 제도로서

의 위상을 점하고 있고, 국가경제를 재편하는 기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제도를 다변화하는 새로운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보자원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information resource)의 제도화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정보 생산과 유통과 분배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범과 규율의 정착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사회 이슈는 특히 '정보의 소유, 표현, 관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 공유 대 전유, 표현의 자유 대 규제, 프라이버시 대 감시'는 핵심적인 논제들이다(Chang, 2005a). 이 글은 이 중에서 표현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공론활동에서의

^{*} Corresponding author: Woo Young Chang, Tel. +82-53-850-3332, Fax. +82-53-850-3328 e-mail. chang0824@hanmail.net

이념갈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은 오프라인과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포스팅 채널, 발화자의 정체성 탈각, 발화 기회의 평등, 동기형(synchronous) 소통의 활성화, 사회이슈로서의 소구력, 집합행동으로의 파급 등 근대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구현하지 못한 공론활동의 역동성이 잠재되어 있다. 더욱이 온라인 소통 기제가 집체적인 커뮤니케이션(웹 1.0)에서 개인 수준의 다원적 커뮤니케이션(웹 2.0)으로 이동하면서 공론활동의 역동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Chang, 2010; 2012).

한편 공론활동의 개방성과 참여도가 비약적으로 신장되면서 그로 인한 역기능도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온라인 공론의 역기능은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통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요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민주화 이후 이념갈등이 온라인공간에 투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다. 이념은 주관적 신념 체계의 산물로 인위적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혜적 상대주의 문화가 척박한 토양에서는 갈등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온라인 내의 자정으로 문제를 풀려는 방임형의 접근과 온라인 바깥에서 문제를 발본하려는 강압형의 접근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이념갈등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갈등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사고하는 통섭도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은 우리사회 온라인공간의 이념갈등의 원인과 특징을 고찰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하는 소고이다. 이어서 주요 사례에서 관찰된 갈등의 특징과 함의를 논의한 다음, 온라인 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분석 사례로는 지난 몇 년간 중대의제로 운위되었던 미국산 쇠

고기 수입 촛불시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18대 대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다루기로 한다. 이 사례들은 온라인 이념갈등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갈등의 원천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규제 철학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II. 이념갈등과 온라인 미디어

어원적으로 갈등이 토양을 공유하는 葛(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뜻하듯이, 개인이나 집단은 상호관계성으로 인해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이 동질적 신념을 가질 수 없는데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한자원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은 원천적으로 예방 혹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기적 인간이 평균적 인간이며 곧 합리적 존재로 간주된다. 인간행동의 합리성은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이 뜻하는 바처럼, 사적 이해가 공동선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한계를 드러낸다). 더욱이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서 분배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가치 추구행위는 규율하기가 난망하다.

이념갈등에 대한 고찰은 거시구조적 접근과 미시심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의 역사적 경험 및 배태된 구조에서 갈등 원인을 찾는 반면, 후자는 개인의 의식과 가치 정향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는다. 즉 양 접근은 구조와 의식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원인과 해법을 논의한다. 굳이 말하자면 양 접근은 '구조 원인론'과 '본성 원인론'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을 상이하게 이해함에 따라 그 처방

Table 1. Type of social conflict

| type | content |
|--------------------|--|
| interest conflict | public goods conflict generating external effect conflict in the market and labor |
| policy conflict | conflict surrounding public policy |
| authority conflict | conflict surrounding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border of the area |
| value conflict | conflict surrounding identity including ideology, culture, region, religion |

* source: Chang & Im(2006).
© 2016 Crisisonomy

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분기된다. 양 접근의 대표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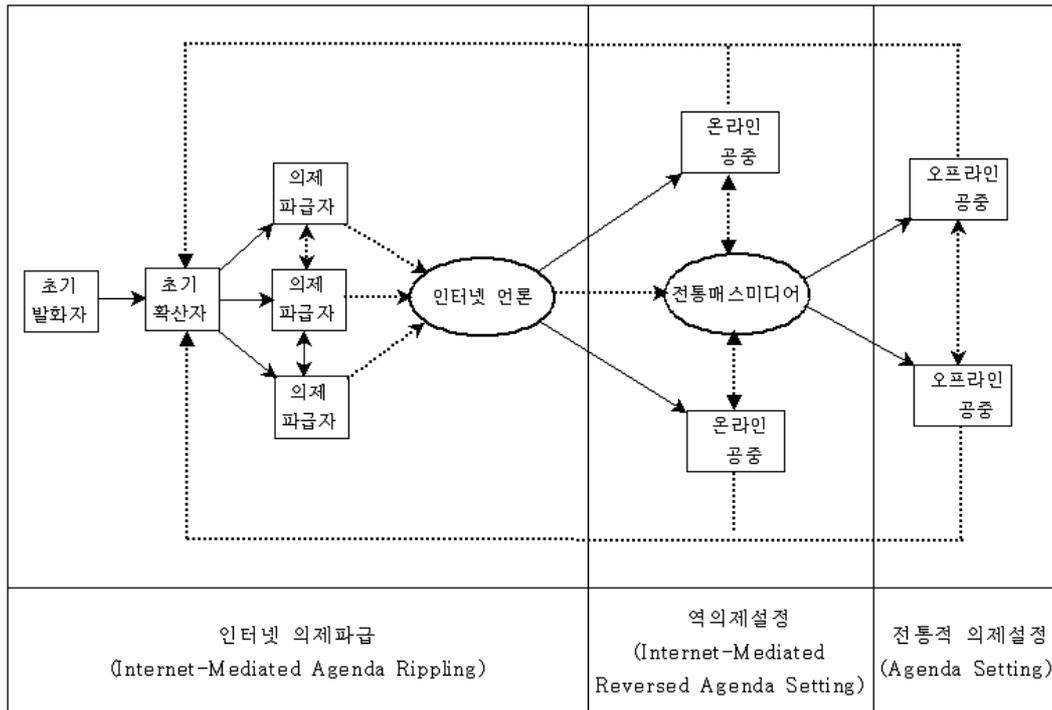
Kang(2004)은 국가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보편적 특성을 갖는 이념갈등의 세 차원으로 좌우(left-right), 권위 대 자유주의(authority vs libertarian), 근대 대 탈근대적 가치(modern vs post-modern values)를 제시한다. 세 차원은 각각 경제적 가치, 권위□질서 대 인권□개인적 자유, 산업시대 물질주의 대 후기산업시대 탈물질주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좌우는 평등과 효율, 국가와 시장, 분배와 성장, 노동과 자본 등으로 양분되는 개념으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체제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 권위 대 자유주의는 공동체 중심의 시각에서 종교적 전통적 가치 및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거나, 반대로 개인 중심의 시각에서 기본권과 정치참여를 중시한다.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는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어 계급균열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가치의 확산을 반영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반공이념을 둘러싼 남남갈등으로, 가장 강력한 갈등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공이념은 대북정책, 대미관계, 국가안보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단순히 정책대안 간의 선호를 넘어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 갈등을 촉진해왔다.

Yun & Yi(2011)는 정치심리학적 분석에 토대하여 개인의 본성 혹은 생래적인 가치 정향이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이념성향은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에 의해 선형적으로 결정되며 후속 경험에 의해 수정되어간다. 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이념성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역으로 개인의 이념성향에 따라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성향 형성에는 도덕성과 개인의 자유 등 인간본성의 생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정치이슈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 차원에 있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념갈등의 주된 출처가 무엇인가의 문제와 함께, 갈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사회적 기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등비용 규모와 공동체 손실 간의 반비례 관계에도 불구하고, 왜 갈등의 악순환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냐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합리적 선택론은 이에 대하여 범례화된 답을 하고 있는데, 개인 이익의 총합이 공동체 이익의 총합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 이익은 사적 이해의 범주에서 추구되기 때문에, 공적 이해의 범주에 놓여 있는 공동체 이익과 조응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은 이러한 문제의 전범이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보편적 행위 전략을 조정하는 사회적 기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제는 규범과 법률 등의 제도,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시스템 및 사회적 관행과 문화를 포괄하는 규제레짐(regulation regime)을 구성한다(Chang, 2014).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도구적 기제는 온라인 미디어이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공론장의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 효과는 대량의 콘텐츠를 유통시키며 수용자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키퍼의 부재와 (비)실명의 의사소통은 개인들을 자발적인 의제설정자로 유인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공론장의 의제설정은 <Figure 1>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경과한다. 첫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슈가 발화되어 시간을 경과하면서 포스팅, 댓글, 퍼내기 등을 통해 온라인공간으로 확산되는 의제파급(agenda-rippling) 단계이다. 둘째, 인터넷 언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웹사이트와 커뮤니티들이 이에 반응하거나 개입하여 온라인 공중의 의제로 수용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온라인 의제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네티즌들의 게이트워칭(gate-watching)은 곧 기성 권력이나 언론과의 의제설정 경합을 의미한다. 셋째, 상기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온라인 의제에 매스미디어와 오프라인 세계가 반응하여 일반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역의제설정(reverse agenda setting) 단계로 나아갈



※ source: Kim & Yi(2006).

Figure 1. Internet mediated public agenda-setting model

수 있다(Kim & Yi, 2006; Park, 2008).

이러한 이슈파급, 온라인 의제화, 역의제설정(reverse agenda setting)의 메커니즘은 매스미디어 의제가 공중의제(public agenda)로 전환되는 전통적 의제설정 방식과 상반된 방향성을 띤다. 즉 참여촉진적 공론활동 환경에서 개인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권력과 언론 등 기성 의제설정자와 경합하는 국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나 사회운동 국면은 물론 생활세계에서 온라인 공론장(public sphere)은 대안 미디어로 정착되었고, 나아가 의제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제들의 이념갈등화가 촉진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치열한 이념갈등 현실에 온라인 공론활동이 맞물림으로써 온라인공간은 이념의 열전지대로 전화되었다. 아울러 온라인 공론장의 운용도 다수결 민주주의(majority democracy)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이질적 집단이 반목하는 이념적 발칸화(balkanization)가 심화되어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Chang, 2010).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온라인공간의 이념갈등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대면 공간(오프라인)에서 풀지 못하는 일을 비대면 공간(온라인)에서 풀어야 한다는 관념은 허구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를 이념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비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노동억압의 원인을 기계에서 찾는 러다이트식 인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온라인 미디어를 불신하여 정치적 탈동원(political demobilization)이나 과잉된 매체규제를 조장하기 십상이다. 온라인 공론활동의 규율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해서 역기능을 제어하고 순기능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첫 시발점이다.

그럼에도 문제성 콘텐츠와 커뮤니티의 발흥 그리고 권력집단의 부적절한 개입은 실질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참조하자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방향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유럽 국가들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제도개입주의(institutional interventionism)이다. 이 경우 시민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토대로 엄격한 정책적 사법적 대응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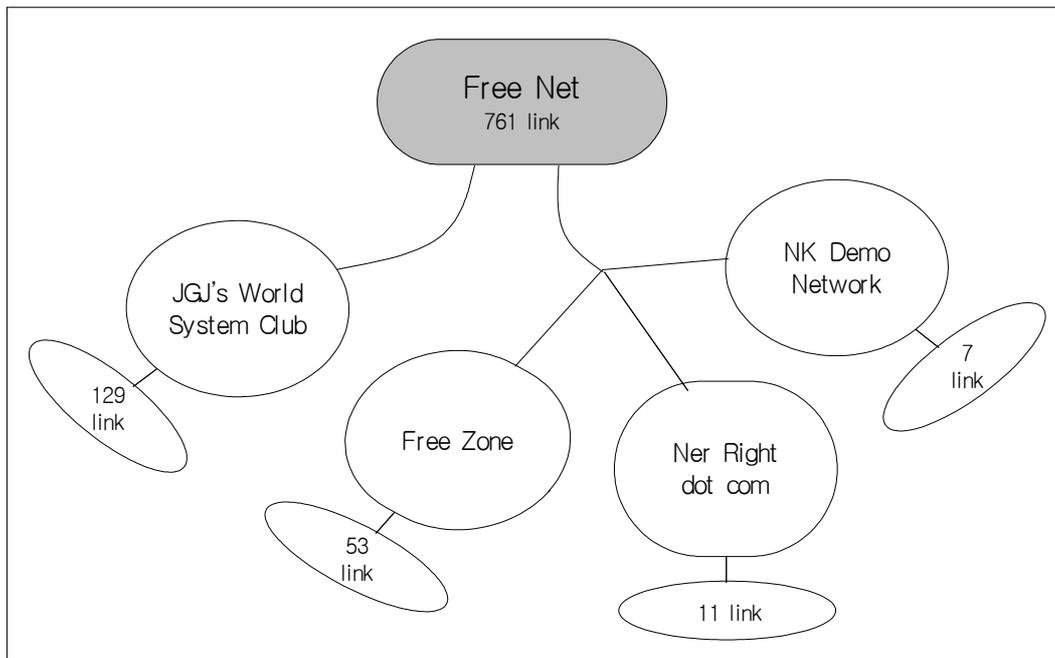
유럽 국가들의 경우 매체의 공공성과 책무를 강조하는 오랜 전통과 함께, 양차대전의 경험으로 인종과 종교 등 배격주의에 대한 불관용이 정착되어 있다. 둘째, 미국의 수정헌법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사상의 자유시장론(free market of ideas)이다. 이는 마치 시장의 자유와 같이 자유로운 표현 경쟁을 통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 미디어의 상업적 발전 전망을 담보하고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정책과 접합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정책 방향은 상이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온라인공간의 표현 문제를 특정하여 규제하는 입법(legal specification)은 가능한 억제하는 자율규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Chang, 2005b; 2006a).

III. 온라인 이념갈등의 기원과 특징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멀리는 분단체제에서 가깝게는 '87년체제'에서 기원한다는 것은 대개의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공의이다. 요컨대 해방정국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국가형성기에 이념은 반공권위주의를 제도화하는데 압도적 요인으로 역할하였다. 이후 민주화 이행과 함께 궤멸된 진보층이 복원되면서 이념균열은 과도정치화(over-politicization)의 양상으로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온라인 이념갈등은 이러한 역사적 체제변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온라인 이념갈등은 어느 시점에서 출원하였을까?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날의 온라인 이념갈등은 2002년 체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6대 대선은 진보 일색의 온라인 공론장의 존재를 확연하게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정치담론을 주도하였던 노사모,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 정치 커뮤니티와 대안연론은 소위 조중동으로 일별되는 오프라인 의제설정자와 첨예한 대립구조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16대 대선을 기점으로 이념갈등은 온라인공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2002년 체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공론활동을 촉진한 물리적 기반의 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발전 전략에 힘입었는데,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가주도형 정보화 추진은 단기간에 공공 및 민간 부문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을 비롯한 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공공 네트워크 선도 구축, 인터넷 이용요금 정액제와 인터넷 카페 확산 등은 급격하게 정보화 이행을 촉진하였다. 이로 인해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00여 만명의 pc통신 인구는 2002년 16대 대선에서 2,700여 만명의 인터넷 이용 인구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적 다원주의의 시너지이다. 정보화 인프라가 물적 토대라고 했을 때, 이에 조응하는 사회정치적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알듯이 당시 우리사회는 직선제 정부와 문민정부에 이어 최초의 권력교체를 이루는 민주화 이행을 구가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행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켜 다양한 이해의 분출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젊은층 중심의 문화적 다원주의가 천년 이상 생활규범으로 내성화된 권위적 유교문화를 잠식하였다. 특히 온라인 공론장은 공간적 특성을 배경으로 이러한 문화이동의 선도적 견인차로 역할하였다. 셋째, 이념적으로 배제된 진보층이 온라인공간을 채널로 균열구조를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진보층은 특정 운동세력의 정파적 응집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산개하여 이해를 표출하는 '약한 유대의 정치(politics of weak tie)' 양상을 띠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노동시장과 생활세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진보층의 규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16대 총선 낙천낙선운동, 반미 촛불시위, 반 세계화 사회정의운동, 안티운동을 위시한 소비자운동 등이 온라인 공론을 매개하여 촉발되었다.

이념갈등은 상대 이념과의 대항을 전제하기 때문에, 진보층의 규합이 곧 이념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이념갈등이 반드시 과도하게 표출되어야 하



※ source: Chang(2006b).

Figure 2. Conservative ecological system on the cyberspace

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제는 어떻게 풀이 할 수 있을까? 우선 왜 온라인 이념갈등이 발생하였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이념이 주요한 갈등소제라는 점에서 ‘왜’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한국정치의 특수한 맥락에서, 온라인공간이 이념갈등의 유력한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공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한 세력의 힘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즉 온라인공간이 제공하는 수혜는 특정 집단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그러한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게 더욱 큰 이점을 준다. 이런 면에서 시기별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신생 온라인 미디어가 출현하게 되면 초기에 진보 이니셔티브가 구축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pc통신, 인터넷, 1인 미디어(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의 각 단계에서 예외 없이 반복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보수독점의 언론지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보수신문과 방송이 언론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소외된 진보층이 온라인공간에서 출구를 찾는 양상이 되풀이된 것이었다. 이는 목마른 자가 단비를 찾아 나서는 격으로, 언론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반

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온라인 이념갈등이 왜 과도정치화의 양상을 띠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온라인 이념갈등의 진폭은 현실 사회의 갈등수준에 좌우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착근된 이념갈등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과잉 이념갈등의 원인을 네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동질화와 이질화 간의 부침이다. 현재의 이념갈등은 보수적 이념 동질화 관성에 대한 이질화의 반작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진보이념은 오랜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저항이념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현실적 효과와 강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반면, 헤게모니를 지속해온 보수 이념은 반공의 경계 안에서 협애하고 불관용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이념갈등의 고조기에 온라인공간이 개입하면서 이념갈등은 더욱 크게 증폭되었다. 둘째, 사회의제의 이념갈등 치환이다. 즉 우리사회는 모든 정쟁의 이슈를 이념문제로 치환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고질적인 갈등형 정치문화와 과도한 권력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게시판 중심의 온라인 참여문화와 세계 최상위

의 온라인 정치참여지수는 이념갈등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셋째, 갈등의 사유화와 편향성의 동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사회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대의 정치집단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이념갈등은 그것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편향적으로 동원되어왔다. 즉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부, 정당, 언론, 지식인 등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며 기득권을 도모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개인 기반의 사회연결망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사인주의(political privatism)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간 이념거리에 비해 정당 간 이념거리가 더욱 확대되고, 대의정치의 갈등해소능력이 취약해져 사법적 판단이 이를 대체하는 정치적 무기력이 팽배해져왔다. 넷째, 이해 표출과 정치적 대표 간의 부조응이다. 즉 이해 표출의 이념 폭이 포괄적 다원적인 반면,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이익 집성의 제도화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의정치에서 배제된 이슈들이 거리의 정치로 나아가거나, 거래비용이 작은 온라인 정치를 촉진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Chang, 2014).

IV. 주요사례 논의

주요 사례의 검토를 통해서 앞에서 논의한 온라인 이

념갈등의 현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근래에 쟁점사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다양한 유형의 이념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컸던 주요 사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례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이하 ‘촛불시위’)를 고찰하기로 한다. 2008년 촛불시위는 민주화 이래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의 사회운동으로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여중고생의 유례없는 대규모 참가가 대변하듯이 감성이 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원인이었다는 주장과, 반정부 세력의 온라인공간을 통한 허위 선동과 조직적 준동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국내외 신자유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계급연대의 확대가 원인이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원인론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 대중의 능력과 위상을 감안하건대, 이러한 표면적 진단이나 선입견적 접근은 단견을 벗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대선사상 최대 표차의 정권교체,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불과한 정치적 허니문 기간, 4월 18대 총선에서 집권당의 과반수 의석 석권, 50~60%대의 대통령 지지율과 20%를 밑도는 야당 지지율, 반미 캠페인 부재 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감성과 이념보다는 정책실패(policy failure)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008년 촛불시위는 발생 이후 갈등관리의 부재와 그로 인한 제반 이념이슈의 폭발을 야기했다는 점이 더

Table 2. Korean Online Participation Index (UNDP)

| year | 2008 | 2010 | 2012 |
|---------|------|------|------|
| ranking | 2 | 1 | 1 |

Table 3. Pros and cons issues of Agora Political Forum in 2008 candlelight demonstration

| issue | posting (%) | pros and cons(%) | | | | |
|--|---------------|------------------|-----------|----------|----------|---------------|
| | | very favorable | favorable | ordinary | opposite | very opposite |
| outline government policy | 1,248 (36.2) | 3.8 | 4.3 | 6.4 | 36.6 | 48.8 |
| suppression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 859 (24.9) | 26.7 | 10.6 | 13.3 | 29.6 | 19.9 |
| US beef import | 420 (12.2) | 7.4 | 8.8 | 14.0 | 39.3 | 30.5 |
| the tone of the conservative press | 169 (4.9) | 2.4 | 2.4 | 4.1 | 37.9 | 53.3 |
| control of media and Internet | 76 (2.2) | - | - | - | - | - |
|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 34 (1.0) | - | - | - | - | - |
| waterway - grand canal | 20 (0.6) | - | - | - | - | - |
| etc | 625 (18.1) | - | - | - | - | - |
| total | 3,451 (100.0) | - | - | - | - | - |

* source: Chang(2010).

Table 4. Conservative newspapers' columns in 2008 candlelight demonstration (May-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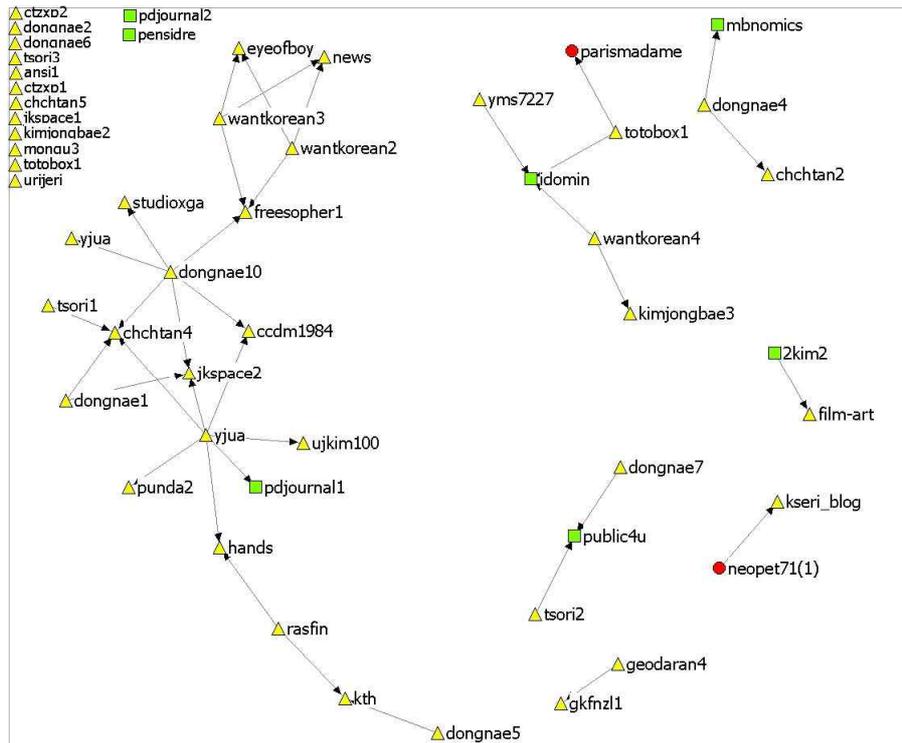
| | JosunIlbo | | DongalIbo | |
|--|--------------|-------------|--------------|-------------|
| | favorable(%) | opposite(%) | favorable(%) | opposite(%) |
| outline government policy | 0(0%) | 20(83.3%) | 0(0%) | 15(88.2%) |
| suppression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 28(35.9%) | 0(0%) | 36(48%) | 0(0%) |
| the tone of the conservative press | 0(0%) | 0(0%) | 0(0%) | 0(0%) |
| US beef import | 32(41%) | 0(0%) | 18(24%) | 0(0%) |
| control of media and Internet | 14(17.9%) | 0(0%) | 19(25.3%) | 0(0%) |
|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 4(5.1%) | 0(0%) | 2(2.7) | 0(0%) |
| waterway - grand canal | 0(0%) | 4(16.7%) | 0(0%) | 2(11.8%) |
| etc | | 121 | | 131 |
| total | 78(100%) | 24(100%) | 75(100%) | 17(100%) |

* source: Chang(2010).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Table 3>은 촛불시위의 메카로 불리었던 아고라 정치토론폰방의 의제 분포와 반응을 보여주는데, 정부의 갈등관리가 실패하면서 이슈가 다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계시글은 12.2%에 불과하며, 정부 정책 총론에 대한 반대가 세 배 가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시위 진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함께, 운동의 중반기를 넘어서며 보수언론, 인터넷 통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이슈로 확산되어갔다. 반

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보수언론의 이슈입장을 통해 되짚어볼 수 있는데, <Table 4>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정부정책 총론에 대한 지적 외에는 시민여론과 명확하게 배치되었다. 요컨대,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시민여론 불감, 보수정치권의 편향성 동원, 진보 운동세력의 이념의제 확대가 교차적으로 맞물린 레퍼토리로 촛불시위의 성격을 복기해볼 수 있다(Chang, 2010, 2012).

온라인 이념갈등은 양극화 구조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 source: Chang & Park(2012).

Figure 3. Power blogger network of Media Daum (May, 2008)

파워블로거 연결망으로서, 소수의견이 고립되고 중립 의견도 왜소한 전형적인 온라인 발칸화 현상을 보여준다. 온라인공간은 개방적이지만 핵심 노드를 중심으로 좁은 세계 네트워크(network of small world)가 배타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두 가지 점으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선호정보와 동류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여과기술(filtering technology)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나아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본성상 설득과 동의의 거래비용 절감을 의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와 사회운동 등 크리티컬 이벤트 국면에서 이념 양극화는 더욱 극명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경우 대다수 의제에서 온라인 양극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념적 접합지대 혹은 그러한 정치실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수 허브의 이슈입장이 과대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두 번째 사례로 일베 현상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일베는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갤러리(이하 '디시 정사갤')에서 유래한 일간베스트의 약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진보 패러디 사이트였던 디시 정사갤에서 일베와 같은 극우 사이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임과 동시에 온라인공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베는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 일베는 그동안 진보 네티즌들이 권위주의를 조롱하는 온라인 하위문화에 대응해서, 민주화 세력의 우월적 자의식에 대한 보수층의 열패감을 극적인 방식으로 대변한다. 일베를 정치현상으로 이해하든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든, 그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매우 공공연한 사회적 실체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우리사회 이념집단 간의 심리적 적대를 독해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일베의 출발은 디시에서 가장 많은 댓글과 인기를 얻는 게시물을 저장하는 문자 그대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였다. 일베에는 베스트 게시물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에 의해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성 게시물도 함께 축적되었다. 그러자 2010년 게시물 삭제 조치에 반발한 사람들이 디시 바깥 공간에 저장소를 만들

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베이다. 그리고 일베는 단순하게 디시인사이드의 게시물을 저장하는 차원을 넘어, 일부 주도적 이용자들이 직접 그 안에서 자체 게시판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나갔다. 2011년 1월 5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일베 사이트의 월평균 접속자수는 2013년 7월 191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바일 접속자 수의 상승폭은 더욱 가팔라서 월 평균 모바일 방문자 순위는 커뮤니티 분야 3위를 기록하였다(Kang, 2013; Jeong, 2012).

일베의 특징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저격, 공감, 자유'로 요약된다. 첫째, 저격은 신상털기와 같은 것으로, 적대적 대상을 SNS□온라인쇼핑몰□댓글 검색이나 구글링을 통하여 신상을 밝혀내고 공격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감은 특정 지역(호남)□인종(유색 외국인 노동자)□성(여성)□정치이념(민주주의/진보)에 대한 적대 의식 또는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자유는 저격과 공감을 위한 일탈과 위법을 용인하는 자유로서 그 대상과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즉 일베는 극우 이념, 호남 적대, 여성 혐오, 민주화 부정,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 가령 일베충이라는 표현과 같이 본인이 막장임을 자랑하고 싶다는 자학 정서가 뒤섞여서 지금의 복잡한 모습을 형성해왔다(Kim, 2013; Han, 2013).

일베는 그동안 진보 네티즌이 주도해온 온라인 하위문화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일베에서의 정보 교환행위는 그 자체로 유희이다. 즉 정보를 생성하며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재미있는 놀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된 역사를 펼쳐 보이는 과정들이 역사 왜곡일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놀이가 되어버리는 순간 역사의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일베의 담론 소통에는 놀이를 통한 유희가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하게 일체화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Kang, 2013).

일베의 문제는 사실 이념적 좌우 여부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 자체에 무

감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베는 ‘열린 사회의 적들’로 치부될 법하다. ‘민주화’를 ‘ 획일화’의 부정적 의미로 쓰는 보편 용례는 익히 알려진 바이다. 유가족들이 5·18 희생자를 보며 슬퍼하는 사진 밑에 ‘홍어택배’ 따위의 게시글을 달거나, 촛불시위에 참가한 세월초 참사 유가족들이 든 영정 사진에 ‘진도 고래밥’ 운운하는 행태에 내적 반감이나 비판이 거의 없다.

이러한 일베의 반민주적 의식에는 민주주의를 자신의 과실로 여기거나 자신과 더욱 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에 대한 열패적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는 것을 획일주의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다. 그 결과 진보 리더에 대한 비하¹⁾를 넘어, 독재자를 전당크²⁾ 식으로 영웅시하는 과도한 반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진보 네티즌이 보수 리더를 비하한 데³⁾ 대하여, 같은 방식의 더욱 강한 응징이 드러나는데, 일베는 이를 민주화라는 또 하나의 권위에 대한 반권위적 저항으로 여긴다.

정리하면 일베 현상은 진보가 주도해온 온라인 하위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진보의 민주주의 소유의식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행태적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베를 열린 사회의 적들로 치부하기보다는 공생자들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진보는 자신이 개척해온 문화적 토양과 가치독점의 자의식에서 일베의 맹아가 움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념을 넘어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등의 반민주주의의 가치관은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선행 연구(Han, 2013; Yun, 2013)에 따르면, 일베 방문자는 주로 청소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일베의 용어와 행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답습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 정치사회화 기제가 가족과 학교로부터, 온라인 미디어와 또래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유념해야 할 정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베가 일본의 재특회와 같이 거리로 나온 넷우익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일본의 넷 극우가 보여주는 바처럼 오프라인으로의 동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이념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 사례로 온라인공간을 매개한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언급한다. 사실 이 사례는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나아가 현 정부에서 이념 대립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문제에 대한 접근이 오도되고 있으며, 4반세기 넘는 민주화 도정을 가장 위협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논점만을 다루기로 한다.

법리 판단이 진행 중이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자체는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개인의 일탈과 조직적 개입간의 공방에 대해서도, 법원의 물증의 답은 구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심증의 답은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다. 해외의 권위 있는 매체들 또한 선거부정의 심각성과 정부 정통성의 문제를 연이어 보도해왔다.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국가정보기관의 상당수 조직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념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시각과 관용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유념할 점은 이 사건의 본질이 개별 집단의 선호와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익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는 것이다. 즉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이념적 좌우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주화 시대에 선거는 유일한 권력획득의 원천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은 폐악발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면 진행은 오히려 불필요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오도된 접근 중 하나가 과연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이

1) 노무노무, 노알라, 운지, 뇌물현, ~노로 끝나는 종결어(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및 짬뽕이, 핵대중, 손상남(김대중 전 대통령 비하) 등.

2) 좌파 불순세력을 쓸어버리는 영웅을 뜻함.

3) 이회창(이회창 전 후보 비하), 쥐박이(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바뀐애(박근혜 대통령 비하) 등.

다. 사실 이는 부차적일 뿐만 아니라, 본말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용인될 경우, 앞으로도 행위의 영향력만 크지 않다면 불법이 관용되는 병리가 횡행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불법 행위가 당락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예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과연 온라인 개입이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하여 논의를 덧붙이기로 한다. 19대 총선에서 약 676만 건의 전수 선거트윗을 비롯해서 팔로우와 리트윗을 분석변수로 포함한, 트위터 캠페인 효과 연구(Chang & Lew, 2013)는 트위터 활용 기간과 리트윗 행위가 후보의 득표율과 당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네거티브 리트윗은 후보의 당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꾸어 말해서 특정 후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리트윗을 확산할수록 낙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오염효과를 야기하여 온라인공간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게 된다. 그 결과 진보 후보에게 더욱 큰 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생 온라인 미디어 캠페인의 왜곡 우려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V. 나오며: 온라인 규제 철학과 정책

우리사회의 온라인 규제레짐은 정보주체 간 관계에서 정부의 규제권한이 과대한 반면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규제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는 합리적 규제문화와 관행에 앞서 규제 자체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과 지나치게 입법 의존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화가 성장적인 측면을 도외시키고 성과적인 측면에 경도되어 온 정책적 경로의존성이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의 전통과 민주화 이후 신권위주의적 통치가 발흥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협력관계를 분화하여 유해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분리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법에 근거한 정부주도의 포괄적 규제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종속된 규제동맹자로 포섭하거나 이들의 무임승차를 촉진하는 퇴행

적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Chang, 2006a).

정부의 전통적인 지위와 역할이 새로운 세계화口정보화의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수행해온 공익활동이나 공공재의 생산이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Kim, 2000). 덧붙이면 온라인 네트워크는 진입장벽이 사실상 해소되어 있고 경계를 넘어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거버넌스 프레임과 과정을 규제레짐에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과 시스템의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정부주도의 규제는 일시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갈등의 고도화 등 비용 대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매체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사회적 이용 범위와 행태도 복합성을 더 할 것이므로, 규제정책과 규제레짐의 근본적 재편에 대한 고민을 필요충분하게 기울여야 한다.

Davenport(1997)는 온라인 규제유형을 <Table 5>와 같이 분류하는데, 이 중 연방주의형과 봉건제형 규제레짐의 핵심적 차이는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의 주도권과 방향성에서 발생한다. 요컨대, 연방주의형이 정보주체들 간의 '공동규제레짐'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봉건제형은 '정부주도적 규제레짐'으로 준용할 수 있다. 인터넷 공동규제는 '민간이 전통적인 정부 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후견자로서 협력/지원하는 규제방식'으로, 정부주도적 규제는 '정부의 강력한 권한과 집행력에 기초해서 민간 영역을 위계적으로 규제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Hwang & Hwang, 2005). 즉 공동규제레짐은 정보주체들 간의 균등한 권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에 기반한다. 반면 정부주도적 규제레짐은 과대한 정부 권한과 시장口민사회의 종속 관계에 기반한다.

Table 5. Regulation right and regime

| type | distribution of regulation right | mode of regulation regime |
|------|----------------------------------|---------------------------|
| I | noninterference | anarchic |
| II | equal allotment | confederal |
| III | oligopoly | feudal |
| IV | monopoly | monarchic |

※ source: Chang(2006a).

이러한 면에서 EU의 인터넷 규제정책의 발전 동향은 참조할 여지가 크다. EU는 정보화사무총국(DG- XIII)의 주도 아래, 1990년대 중반 이후 공동규제시스템을 정초하기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을 진행해왔다. 액션플랜은 유럽 거버넌스(European governance)의 맥락에서 이용자와 사업자의 권한 강화 및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공동규제레짐을 추동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리터러시(literacy), 인터넷 핫라인(hotline),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인터넷 자율등급제(self-rating/filtering system)가 핵심적인 규제수단으로 촉진되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왔다(European Commission 2003; Waltermann & Machill, 2000). 특히 공동규제레짐에서 민간 영역은 주로 유해정보에 대해 대응하고, 정부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불법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분리주의 정책은 효율적인 성과로 평가된다(Chang, 2005b).

우리사회도 이러한 온라인 규제 원리와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 초기부터 정부는 자율규제정책을 천명해왔지만, 실제로는 정부주도형 규제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위험적 법조항을 양산한 반면, 갈등에 비해 실효를 거두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과거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이, 정부가 이념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행위자로 역할해온 것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 결과 한국은 UN프리덤하우스□OpenNet Initiative□국경없는 의사회 등 국제기구에 의해서, 지난 수년간 인터넷 검열국가군으로 분류되거나 언론□표현의 자유 순위가 크게 떨어져왔다. 현재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자율규제 원칙과 공동규제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가동하

여 규제 정당성과 실효성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 행위를 특정하는 목적적 규제입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불법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베의 경우 사회적으로 커뮤니티 폐쇄 등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왜곡된 콘텐츠에 국한해서 계몽과 처벌의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현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을 열어 이념적 화해를 시도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 영역에 비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엄단하는 선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적 선거개입과 같은 반헌법행위를 발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비정상적 정상화의 전범(典範)을 확인시켜줄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론장 생태계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한 한 가지 제안으로 속의 공론장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집단이 합리적인 토론규칙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도모하거나, 보수와 진보 그리고 대중과 전문가가 공동 운영하는 의제토론 공간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온라인 이념갈등 문제 해결은 정파적 이해와 관성적 대응에서 벗어나, 갈등을 수용하는 창의적 실험과 도전의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 Chang, Woo-young. 2005a. Cleavage Structure of Information Society and Democracy. *Society Theory*. 28: 119-154.
- Chang, Woo-young. 2005b. The study Internet Content Regulation Policy of EU. *International Area Study*. 8(4): 275-308.
- Chang, Woo-young. 2006a. The Politics of Internet Regulation. *Social Science Study*. 14(1): 34-71.
- Chang, Woo-young. 2006b. The Ideology and Politics on the Cyberspace. *Korea and International Politics*. 22(4): 221-254.
- Chang, Woo-young. 2010. Online Public Spher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Politics Study*. 21(1): 1-26.
- Chang, Woo-young. 2012. Networked Individualism and Civil Protest. *Korean Politics Study*. 19(3): 25-55.
- Chang, Woo-young. 2014. Overcoming Ideological Conflict and Seeking Reform Plan. *Social Science Review*. 13.
- Chang, Woo-young and Im Jeong Bin, 2006. Intergovernmental Rent-Seeking and PIMFY Conflict. *National Strategy*. 12(3): 167-199.
- Chang, Woo-young and Seok Jin Lew. 2013. Political Effects of the Social Network Campaig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7(4): 93-112.
- Chang, Woo-young and Han Woo Park. 2012.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Korean Blogospher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22): 216-230.
- Davenport, T. H. 1997. *Information Ecology: Mastering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Environment*. Oxford Univ. Press.
- Han, Yun Htung. 2013. The Review of Ilbe in the Trend of Korean Ideological Conflict. *Progressive Review*. 57. 14-32.
- Hwang, Seung Heum and Seong Gi Hwang. 2005. *Internet Self-Regulation*. Paju: Communication Books.
- Kang, Won Taek. 2004. Empirical Analysis of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m Nam Conflicts. Institute of East Asia(ed.), *The Diagnosis and Resolution Policy of Nam Nam Conflicts*: 55-100.
- Kang, Jeong Seok. 2013. The Storing Place of Ilgan Best, Arising Ilbe. *Cultural Science*. 75: 273-302.
- Jeong, Dae Hun. 2012. On the Attitude Coping with Ilbe. *History Problem Study*. 30: 25-55.
- Kim, Seok Jun. 2000. *New Governance Research*. Seoul: Daeyoung Publication.
- Kim, Seong Tae and Young Whan Yi. 2006. Adaptation of New agenda-Setting by Internet. *Korean Journalism Science Review*. 50(3): 175-204.
- Kim, Youn Su. 2013. The Analysis of Ilbe's Political Influence Mechanism. *Proceeding of Critical Sociology*: 353-362.
- Park, Ju Hyun. 2008. Internet Use and Agenda Rippling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Korean Journalism Science Review*. 52(3): 396-421.
- Waltermann, Jens, and Machill Marcel (eds.). 2000.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 Webster, F. and Gi Jo Dong (trans.). 1997. *Information Society Theory*. Seoul: Nanam Publication.
- Yi, Yun Hwei. 2005. Social Role of Countermovement. *Discourse* 201. 8(1): 5-31.
- Yun, Bo Ra. 2013. Ilbe's Misogynie. *Progressive Review*. 57. Seoul: Progressive Review Publication.
- Yun, Seong Yi and Min Gyu Yi. 2011. Reconstruction of Ideology Measurement of Korean Society. *Assembly Politics Study*. 17(3): 63-82.

Received: Oct. 12, 2015 / Revised: Dec. 1, 2015 / Accepted: Dec 28, 2015

온라인 미디어와 이념갈등의 위기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온라인공간의 이념갈등의 원인과 특징을 고찰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먼저 온라인 이념갈등의 기원과 특징을 고찰한다. 이어서 이 논문은 주요 사례들을 다루고 관찰된 갈등의 특징과 함의를 논의한다. 분석 사례들로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의 중대 의제로 운위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시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18대 대선을 다루기로 한다. 이 사례들은 온라인 이념갈등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우리가 갈등의 원천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연하면 이 사례들은 한국 정보사회의 이념균열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바,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되짚어 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궁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온라인 규제 철학에 토대해서 미래 온라인 규제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규제정책, 온라인 미디어, 위기, 이념갈등

Profiles **Woo Young Chang** : He got the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title: The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2003 Aug) He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i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nd he published the following article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process and political communication. “The Challenge of De-regionalism and the Ups and Downs of the Regional Hegemonic Party System(2014)”, “The Political Effect of SNS Campaign(2013)” (chang0824@hanmail.net).